

# 대학 정책과 경제 논리

장 상 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1. 머리말

지금 대학사회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제를 앞세운 교육개혁의 바람을 타면서 큰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1995년 5월 31일에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고, 이전에도 대학평가인정제('9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학사 정원의 자율화를 골자로 한 대학 자율화 조치('94. 12. 8) 등 대학과 관련된 조치들이 대학개혁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5·31 교육개혁안에 대해서 대학은 개혁의 흐름 속에서 교육당국의 개혁 지침에 따라가고 있지만, 정부 개혁추진이 재정적 유인과 결부되어 있어 각 대학은 개혁을 자율

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교육당국의 개혁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내실없는 성과 올리기에 급급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약육강식의 자유시장 경제논리가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학 정책의 기초를 이루게 되면서 기초학문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오늘의 대학 현실과 대학 황폐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의 대학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대학현실 : 양적 비대와 부실화

오늘 한국의 대학은 양적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팽창한 반면, 질적으로는 너무나 부

실하다. 1995년 현재 고등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 131개교, 학생수 118만여 명, 교육대학 11개교 2만 명, 전문대학 145개교 67만 명, 방송대학 31만 5천 명, 개방대학 17개교 12만 명, 각종학교 22개교 1만 7천 명, 대학원 11만 3천 명으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수는 총계 234만 명에 달한다. '80년 61만 명, '90년 149만 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1만명당 대학생 수는 '80년 157명에서 '90년 342명으로, '95년 현재는 400명(전문대학을 포함할 경우 525명)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구 1만명당 대학생 수가 200명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비율이 예외적으로 높은 미국(1만 명당 530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최고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1980년 27.2%, 1986년 36.4%에서 1995년 51.4%로 급격히 상승했다. 재수생을 포함한 입학률은 '80년 43.3%, '86년 47.5%, '95년 74.2%로 높아졌다. 결국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자 4명 중 3명(1명은 재수)은 대학에 진학한다는 계산이다. 정말로 전 국민의 대학생화라고 할 정도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내기를 원한다. '93년 조사로 가구주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 수준을 보면 대학교 이상 교육을 시키겠다는 가구주의 비중이 아들의 경우 86.5%이고, 딸의 경우는 79.4%에 달한다. 대졸 가구주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이상 교육을 시키겠다는 비중은 아들의 경우 99.0%(45.7%), 딸의 경우 98.0%(33.8%)나 된다.

이렇게 대학생은 과잉이지만, 대학교육의

질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95년 현재 교수 1인당 대학생 수는 34명(방송대, 전문대학을 포함할 경우 52명)으로 교사 1인당 초·중·고 학생수 23명에 비해 훨씬 낮다. 선진국에서는 교수 1인당 학생수가 대개 10명 내외이며, 대만도 13.5명이다. 이렇게 많은 대학생을 상대로 한 많은 교육시간 때문에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학생들에 대해 개별적인 대면과 지도를 통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른바 일류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여 수준 높은 박사학위 취득은 여전히 외국 대학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대학입시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공부하지만, 일류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장래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느슨한 학교생활을 보낸다. 그러나 외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정말 공부를 시작하여 모두들 의과대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요학점을 따지 못하고 졸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부터 한국의 대학교육은 사립대학 비리의 문제도 안고 있다. 사립대학 학생비율이 67.6%이고 교육대학과 방송대를 제외하면 무려 79%나 될 정도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S대, T대, C대, M대 등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대부분의 사립대학 재단 설립 및 운영자들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커녕, 자신의 사리추구에 급급하고 있다. 교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와 운영과정에서 낭비와 횡령 등이 자행되고 있다. 대학을 진리탐구의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법이 학교 법인과 경영자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3. 대학 팽창과 부실화의 영향 : 인력 수급 불균형과 사교육비 급증

높은 교육열은 그동안의 고도 경제성장을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지나친 고학력화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되었다. 인력 수급을 도외시한 교육정책이 이를 부채질했다. 많은 국민들은 교육을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고등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정부는 인력 수급보다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 공급에 치중해왔던 것이다. 대학의 양적 팽창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양적 팽창은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현재 노동시장을 보면 제조업,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직은 크게 부족한 반면, 관리직 취업희망 대졸자는 과잉으로 취직난을 겪고 있다. 인력난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가. 실업률은 '96년에 2.0%로 전망되고 있으나 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은 '93년 1.72배에서 '94년 2.22배, '95년 6월 현재 3.13배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996년의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이 7.4% 수준일 경우, '95년 부족률 3.71%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력 부족률은 전산업 3.7%, 생산직 5.8%이고, 주요 생산직 부족률은 전자 10.8%, 직물 10.8%, 조선 8.5%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인력난이 심화된 것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인 취업비율은 15~19세, 20~24세, 25~29세의 연령계층에서 각각 7.0%, 46.5%, 85.3%로 일본의 17.9%, 71.7%, 94.2%보다 현격하게 낮으며, 대만의 20.2%, 64.8%, 91.9%보다도 크게 낮다. 이러한 청년노동력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는 지나친 고학력화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제조업 인력난은 경제 전체의 인력부족이 아니라 부문별 인력 수급 불균형의 소산이다. 청년층, 대졸자, 사무관리직의 경우는 구직난이 심각하다. 1992년 전체 실업률이 2.4%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15~19세 연령층 실업률은 11.9%, 20~24세 연령층은 9.9%로 대단히 높았다. '1993년 한국 가구 패널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 8.9%는 장년층 실업률 2.6%보다 3배 이상 높다. 청년층의 잠재실업률은 7.7%이고 실업자와 잠재실업자를 합한 사실상의 실업률은 15.9%로 엄청나게 높다. 청년층의 사실상의 실업자는 약 80만 명에 이르고 1993년 전산업 노동력 부족인원인 17만 명을 크게 상회한다. 1993년 고용인구 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잠재실업자의 비율은 청년층 14.7%로, 전체 10.1%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고용이 되었다고 해도 고용불안정 인구도 대단히 많다.

인력 수급 불균형은 인력부족 기업의 생산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1991년 인력부족의 경제적 손실은 산업재해(GDP의 1.7%), 노사분규(GDP의 0.6%)보다 훨씬 큰 GDP의 5~6%로 나타났고, 그 규모는 10~12조 원에 이르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93년의 경우 인력부족의 경제적 비용은 GDP의 6.8~7.4%로 16~17조 원이 된다. 이것은 같은 해 산업재해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각각 4조 4천억 원(GDP의 1.6%), 2조 5천억 원(GDP의 1.0%)이었던 것에 비해 훨씬 크다.

또한 인력 수급 불균형은 실업상태에 있거나 하향 취업하는 대졸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 대학생 과잉으로 대졸자의 절반 가까이는 졸업당년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하향 취업을 한다. 1995년의 경우 대학 졸업자 18만 명 가운데 취업자는 9만 7천 명으로 취업률은 53.9%에 불과했다. 신규 대졸 남자의 연도별 취업률은 '80년 83.4%에서 '88년 63.4%로 내려갔고 현재 약 50%밖에 안 된다. 대학원 재학생수도 '85년 6만 8천 명에서 '95년 11만 3천 명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대졸학력의 취업부진이 가져온 학력인플레이의 증거이다. 실업(취업재수) 상태에 있는 대졸자들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고용안정성이 높고 임금수준 및 작업조건이 좋은 화이트칼라직(국가공무원 또는 대기업의 관리직, 사무직)에 취업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부모형제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는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고소득층 자녀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부족하여 실업기간이 길다. 그들의 70%는 심리상태가 불안하며,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던 사람이 24%나 된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대학정원 확대정책의 희생자들로서 10년이라는 소중한 청년기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둘째, 대학의 양적 팽창은 사교육비 급증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금인상

의 요인이 된다. 높은 대학교육열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자녀를 대학에 넣기 위하여 많은 국민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 중소기업의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까지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학원비 부담 때문에 부인이 저임금을 감수하면서 파출부로, 상점 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세계화=영어능력 제고'라는 식으로 잘못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영어 과외열풍이 대부분의 가정을 휩쓸었다. 교육개발원의 추정에 의하면, 1994년 현재 사교육비 부담은 17조 5천억 원에 달해 공교육비 16조 7천억 원보다 많다. 가장이 40세 전후로 두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월급의 20~30%를 사교육비로 쓴다. 현재 학원강사 수는 9만 7천 명이고, 현재 640만 명에 달하는 초·중학교 학생의 대부분이 방문학습교재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방문교사의 수도 1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교육관련 산업의 과도한 팽창이 또한 생산인력난을 부추기는 요인이며, 대졸 실업자와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제살 뜯어먹기의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는 셈이다.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은 대학입학의 열망에 비해 공교육의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학급당 50명의 과밀학급, 교사에 대한 낮은 대우, 과도한 수업 시간수, 교사와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는 교육관료와 사학의 전횡 등으로 아이들은 전혀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공교육의 낙후로 부유층 가운데서는 자녀 유학보내기 열풍이 불고 있다. 유학 및 연수비용으로 외국에 지급된 외화는 '95년에 10억 달러로 '94년의 유학 및 연수경

비 6억 6천 달러에 비해 53.7%나 증가했다. 이같은 유학 및 연수경비 급증으로 이 부문에서의 수지차 적자가 여행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95년 여행수지 적자는 12억 2천 2백 9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해외유학 및 연수부문에서의 적자가 9억 7백 92만 6천 달러를 기록,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95년에 해외유학을 보낸 학생수는 2만 8천 명 수준이었다.

#### 4. 대학 팽창과 질적 저하의 원인

대학 졸업자들이 취직이 잘 되지 않는 데도 우리 부모들은 왜 기를 쓰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는 것일까. 대학을 나와야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관리직 사원이 되어서 안정된 임금과 갖가지 음성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 입학 열풍은 권력집중과 남용, 부정부패, 학력별 대우 격차 등 한국 자본주의의 총체적 모순의 결과물이다.

첫째, 권력집중에 의한 부정부패 심화가 대학입학열을 부추겼다. '95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현금 이외에 각종 국책사업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30대 재벌로부터 조성한 뇌물의 총액은 2천 3백 59억 원에 달한다. 공사대금이나 발주대금의 3~5%를 뇌물로 바쳤다고 하며, 국제적인 무기도입에는 도입가격의 3~5%에 이르는 공식적 커미션을 포함해 10~20%가 로비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부정부패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부정부패는 지하경제의 한 부분을 이룬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박영수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88년의 경우 GNP의 12.9%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1993년 현재 지하경제가 국민총생산의 22%, 5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1994년 현재 전국의 연간 사채 이용규모는 34조 원으로 국민총생산의 11.2%에 달한다. 부정부패의 크기만을 대략 계산해보면 정부재정 중 사업비 지출의 10~20%는 다양한 경로의 음성수입으로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데 이것은 전체 공무원 인건비의 1/4~1/2에 달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민간기업에 비하여 공무원의 봉급이 적음에도 공무원 지망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창궐하는 것은 재벌체제와 반민주적인 권력의 집중, 감사원의 역할 미흡 때문이다. 재벌체제 아래에서 재벌총수는 계열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 절대적 정치권력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반으로 뇌물을 강요할 수 있다. 정책금융이 전체 금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용자결정에서 정부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정부는 인·허가 권도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은 사당(私黨) 체제로 당총재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국회의원도 독자적 의사결정권이 없고 권력은 여당 총재를 겸하는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체제 아래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부패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한다.

둘째, 학력별·직종별 격차의 심화도 대학

교육 수요 증가의 원인이다. 한국은 직종별·학력별·성별 임금격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크다. 직종별·학력별·남녀별 임금격차는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고학력자의 과잉 등으로 꾸준히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95년 현재 아직도 고졸/대졸=0.64, 여자/남자=0.60, 생산직/전문관리기술직=0.65로 선진국들에 비하면 격차가 크다. 초임의 격차는 작아졌지만, 대졸 관리직의 경우 승진의 기회가 유리하기 때문에 생애임금 면에서는 생산직보다 2~3배에 달한다. 전국 25개 일반은행의 연간 1인당 인건비는 '91년의 2천 40만 원에서 '95년에 3천 9백 40만 원으로 93% 상승했는데, 제조업은 '91년 1천 70만원에서 1천 7백 80만 원으로 66%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은행 임금은 제조업 임금의 2.2배에 달하게 되었다. 여기에 생산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높고, 정년이 짧으며, 사회적 위신이 낮다. 더구나 대졸 관리직은 부정부패에 의한 음성적 수입을 얻을 기회가 많다.

게다가 1994년 현재 생산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1.1시간으로 사무직 45.7시간보다 무려 6시간이나 길다. 또 고졸 생산직 노동자가 더 많이 겪는 산업재해를 보면 1994년에 8만 5천 9백 48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2천 6백 78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장애자가 되었다.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보상적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서비스업의 임금이 더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재해율은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해서는 물론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3~4배에 달한다. 국민 1천 명당 노동손실일수는 4천 3백 71일인데 일본은 4백 59일

이고, 대만은 1백 84일에 불과하다. 대만의 산업재해는 신체장애자 기준으로 한국의 약 1/3, 사망자 기준으로는 1/10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정부패에 의한 음성수입의 존재와 임금격차, 산업재해 아래에서 누가 저학력으로 생산직에 취업하려고 하겠는가.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수입과 승진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관리직, 전문직을 겨냥하여 고학력 취득 욕구가 심화된 것이다.

## 5. 정부 대학교육 정책의 문제점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가운데 대학교육의 개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대학을 특성화하고 다전공, 복합 학문연구가 가능하도록 최소전공인정 학점제를 도입한다. 세계화·정보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단설 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

### ② 대학 설립,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대학 설립을 인가제에서 준칙제로 전환, 학교의 설립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 설립기준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평가와 연계하여 대학정원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고, 학사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 ③ 학술연구의 일류화

대학의 연구수준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석학과 공동으로 편집하는 한국 주도의 국제학술지 발행을 지원하며, 이공계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현대화·첨

단화한다. 대학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재정을 차등지원하되, 지원단위를 대학에서 계열 또는 학부(학과) 단위로 전환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한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을 교수연구비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우수 교수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 ④ 대학교육의 국제화

국제관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설치, 국제 지역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수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해외교민 밀집지역에 우리나라 대학의 분교설립을 지원한다.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정책의 핵심은 시장경쟁의 논리를 대학 운영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따른 경쟁체제의 도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정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시장지향적인 대학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교육은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래에 대비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장에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전체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기하면 문제가 심화 누적된다.

시장논리를 도입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공급과 지식생산에 치중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개혁안을 밀고 나갈 경우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기능적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아카데미즘이 실종될 우려가 있다. 공동체의 보전과 장기적 발전에 기초가 되고 응용연구의 토대가 되어야 할 인문과학

과 순수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대학 설립의 자유화와 정원 자율화도 교육을 시장경제체제에 편입시켜 공교육의 문제를 대학간 무한경쟁과 국민 개개인의 사적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쟁에 의한 연구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이른바 매칭펀드(대응연구자금)를 획득해야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대학의 모든 연구를 기업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초학문은 일종의 공공재와 같으므로 당연히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학부제의 도입도 교육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이지만, 교육을 단순히 서비스 상품으로 파악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부제 실시는 학문간 균형있는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인력 수급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학부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대학 학업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인기있는 학문분과에 들어가거나 최소학점으로 복수전공을 하는 데 힘을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물리는 전공이나 과목을 제외하면 다수의 전공과목 및 실험과목이 폐강될 것이며, 특정 전공의 경우 지원학생이 적어 학과 운영이 곤란해질 것이다. 물리, 화학 등 기초학문은 설 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또 학부제 시행은 재정상태가 허약한 대학으로 하여금 교수 채용수를 줄이는 방편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 수강생이 적은 과목의 폐강 등 강의 경감에 대해 교수당 책임시수를 줄이는 대신 교수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 활성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운데 강행되는 학부제는 전문인력 양성의 포기라는 역작용을 낳게 된다. 그 결과 외국 대학에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을 의뢰하게 되는 파행이 연속될 것이다.

둘째,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과도한 경쟁체제의 도입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 명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불공정한 게임으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지방대학은 경쟁을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되고, 결국 중소도시에 위치한 대학이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중소도로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심화시킨다. 일류대학과 지방 비일류대학을 서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정의 분과, 학과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정보제공에 그쳐야 한다. 우수대학 공모를 통한 집중지원 방식이 아니라 여러 대학의 인재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양적 비대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 위에서 본 대로 대학의 문제는 사회의 모순과 불균형 문제라는 독립변수가 초래한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정원을 자율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정부패의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학은 난립하고 더욱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 대학교육 내용의 질적 강화방안이 비현실적이다. 의지만으로 세계 일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확충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할

교수의 자율권을 증진하는 방안은 없고, 사립대학에서 사학재단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정부는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국립대학까지도 공립화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 6. 대학교육 정책의 방향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니라 그동안 고도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한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경영의 악화, 국민소득 규모에 대비해 지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심화된 토지문제,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의 노동문제, 소득분배 불평등, 지하경제가 국민총생산의 20%에 달할 정도인 부정부패 등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단계에서 기능했던 방식으로서 현재의 조건과는 맞지 않다. 이제는 국내 자본들도 기술발전에 의한 초과이윤 획득방식으로 국내·외 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발전단계에 있다.

그동안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여 행한 병영식·주입식 교육체제는 중저품질, 저가의 상품을 대량생산하여 수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 내에 양성하는 데는 그런 대로 기여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우리의 대학교육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대학은 과학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대학의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는 침체되어 있는 학문과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공급과 지식의 생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대학과 기업은 다른 사회조직이며,



대학의 발전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이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학문 연구와 교육이다. 기업에서도 연구와 기술 개발 및 교육을 한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사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회의 유지와 계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대학은 기초적이고 순수한 학문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에 일차적인 임무가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응용적 성격의 연구와 지식 전수는 기업이 연구소나 사내 교육기관을 통하여 수행하거나 일부는 대학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 수혜자가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부제가 아니라 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 정원을 현재의 2/3 정도로 축소하여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서 기본적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는 입학한 학생 가운데 70~80% 정도만 졸업이 될 정도로 대학의 학업이수가 어렵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사고시와 같은 전국적 차원의 대학 졸업자격 시험을 통해 대졸자의 지적 수준을 일정한 정도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 교수의 질높은 연구 촉진을 위해서는 일본처럼 연구비는 신청하기만 하면 나오도록 해야 하고, 연구의 질 향상은 연구자 집단 속에서 논문의 학회지 게재심사 강화 등 자율적인 통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질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대학 본연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직접적 기술개발 필요에 따른 지원 이외에 조건 없이 그야말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기부와 지원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나 사찰에 대한 기부나 유흥으로 쓰이는 돈은 많은데 대학에 대한 기부는 대단히 빈약하다. 국립대의 경우 교육부에 의한 행정적 통제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재단에 의한 전횡 때문에 국민들은 대학에 대한 기부를 꺼린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 정부는 후발대학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종합적 차원의 지원만 하고, 구체적인 재정의 운용은 학교의 주체인 교수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재단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국가와 사학자본의 전횡(독재?)으로부터 대학을 해방시키는 것이 대학 개혁의 출발이다.

나아가 지나친 대학교육열은 한국사회의 학력별·직종별 격차, 부정부패의 심화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모순 해결이 대학개혁의 기본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

장상환/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  
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상대 경제학  
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등  
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한국사회의 이해』(공저),  
『제국주의와 한국사회』(공저), 『한국의 농업정책』(공  
저) 등이 있고,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독점자본의 지배구조”, “최근의 경제위기와 90년대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